

구례군 이재민 두 번 올린 불량 임시주택

설계와 다른 규격 미달·저가 자재 사용... 난방 취약 문 대통령 지시로 임시주택 50채에 국비 15억 투입 업체 "수급문제로 변경했고 군과 협의" 군 "전수조사"

구례군이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설치한 임시주택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와 차이가 나는 자재를 사용해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것은 물론 겨울을 앞두고 난방 문제도 심각하다.

29일 구례군과 업체 등에 따르면 군은 8월 말 조립식 임시주택 50채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긴급 지원된 임시주택의 한 채당 납품가격은 3000만원으로, 모두 15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지난달 25일 납품된 주택은 24㎡(7평) 규모로 작은 화장실과 싱크대, 불박이장, 벽걸이형 에어컨 등을 갖췄다.

문제는 설치된 주택이 시방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규격 미달이나 저가 자재로 시공됐다는 것이다.

구례군이 확인한 결과 기초와 뼈대 역할을 하는 철재 골조는 규격품인 'ㄷ형강'이 아닌 일반 철관을 절단해 썼다. 가격이 비싸지만 강도가 뛰어난 아연 강관 대신 일반 파이프를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파이프는 설치한 지 불과 한달여 만에 녹이 슬고 있었다.

주택을 감싼 벽체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단열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자재를 사용해 하지만 비교적 값싼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가연성이 커 대형 물류 창고나 상가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단열 능력도 떨어진다.

일부 주택은 벽체 두께조차도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져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리산에 둘러싸인 구례는 도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아 주택 단열이 매우 중요하다. 부실시공으로 올 겨울 이재민들의 겨울나기가 우려된다.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아직

한겨울이 아닌데도 추워서 옷을 두 벌이나 껴입고 잔다"며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임시주택을 뜯어보거나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값싼 재료로 손쉽게 공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군청은 뭘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시공 업체에 자재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만 확인해도 손쉽게 벽체나 골조의 규격 미달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례군의 행정에 비난의 눈길이 쏠

리고 있다. 제작업체 관계자는 "공기가 촉박한 상태에서 우레탄 등 원하는 자재 수급이 안 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군청과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수해라는 재난 상황에서 자재 등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해 부실 시공 여부 등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연합뉴스



코로나 완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는 29일 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산수동과 두암동을 잇는 필문대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남대병원장 1순위 후보자 직원 채용 점수 평가 '구설수'

전남대병원장 선임을 앞둔 가운데 교육부에 1순위 후보로 추천된 A교수가 직원 채용 문제를 놓고 구설수에 휘말렸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원무과 접수수납 직원 채용 과정에 참여, 서류심사를 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점수를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작성한 전남대병원 채용과정 조사결과 처분서에는 A교수를 비롯한 9명의 교수와 직원 등 심사위원들에 대해 "지원자 심사자료와 부합하지 않은 평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측에 경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표창이나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적용해 A교수 등을 불문경고 처분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원무과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서류심사(31명)를 하면서 A교수는 면허(중)나 자격(중) 사항이 하나도 없는 응시자 2명을 최고점인 'A'로 평가한 반면 면허·자격을 1-6개 소지한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점인 'D'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 A교수가 면허·자격이 없음에도 'A'를 준 응시자들은 총 합격자 5인의 명단에 들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전남대병원에 서류전형 평가시 우대 사항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한 객관적인 배점 기준을 마련해 객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전남교육청 장관상

전남교육청이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2020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도 교육청은 봉사 대상 인구 수와 관련한 4개 지표를 점수로 환산하고 공공도서관 실적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독서환경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서비스 확대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해오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삼육초, 방과후학교 지침 위반

광주사립학교인 삼육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을 어긴 사실이 시교육청 조사에서 밝혀졌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민원에 따라 삼육초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육초는 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월별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학기당 수강료를 징수했다.

이에 따라 삼육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또 삼육초는 강사료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강료 환불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방과후학교 1~6학년 통합 운영 지침을 어기고 학년별 운영을 했으며, 정규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 있는 국어·영어·수학을 방과후학교 과목으로 운영한 것도 지침 위반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법원, 일 미쓰비시重 국내 자산 강매 수순

대전지법,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내달 10일까지 의견 제시 없을엔 심문 절차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할 압류명령문에 대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앞서 지난 9월 7일 매각명령과 관련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한 바 있

며, 이에 따른 매각 명령의 효력은 오는 11월 10일 지정 발생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와 압류결정문에 대한 송달이 필요한데,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1년 넘도록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극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

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 약 8억 4000만원 가치의 자산을 압류하고 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김경희 변호사는 "압류된 자산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결정문과 심문서가 전달돼야 한다"면서 "공시송달되면 법원이 언제든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강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5·18기념재단, 내달 6일 40주년 학술대회

기존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2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무한텍스트로서의 5·18"이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5·18'을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자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될 수 없는 '무한히 열린 텍스트'로 보고, 5·18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발견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한순미 조선대 교수가 '오월 여성 데칼코마니: 대신에/동시에 말하기', 오윤성 번역가가 '통곡으로서의 사진들',

공진성 조선대 교수가 '5·18과 근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김항 연세대 교수가 '항구적 내전과 대표의 종언'의 주제로 발표를 갖는다. 김형중 조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2부는 발표자 포함 총 20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난장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해 현장 참석은 사전에 예약을 받은 30명으로 제한한다.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청중을 위해 해당 내용은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노동부가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와 의 단체교섭 재개에 앞서 해직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29일 오전 각각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임금과 경력

등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최근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요구 재판에서 승소해 7년간의 법의 노조 기간을 마치고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며 "하지만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1989년 교사직을 잃은 1500여 명의 조합원들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병역면탈범죄 신고 연중 접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병역면탈 제보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으로, 주요 면탈 사례로는 고의체중 증·감량,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청력장애 위장, 손목인대 고의 손상 등이다.

범죄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29-중-44360호

성장에 중요한 시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조숙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제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조숙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원 한의원

저희 서정한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 바랍니다.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 가능
02-515-858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빌딩)
분당선 선정역역 2번출구에서 약 60m/라미다 서울호텔 맞은편

소아비만, 성조숙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